

국제정치 연구의 한국적 현실과 대안을 위한 방향 모색

유진석 · 박건영

숙명여자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 II.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의 현주소
- III. 왜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이 문제되는가?
- IV.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의존성 지속의 메커니즘
- V. 한국적 대안의 방향
- VI.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한국적 국제정치학(Korean-style IR), 대미의존성(dependence on American IR scholarship),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신현실주의(neorealism)

국 문 요 약

이 글은 한국 국제정치학이 안고 있는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론이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관련해 필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유래한 보편적인 국제정치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중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기존 주류이론을 비판적, 주체적,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의 현주소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기존 논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왜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이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왜 대미의존성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대미의존성의 지속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의존성 극복과 한국적 국제정치학 정체성 수립의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지향점 내지 대안적 접근에 대해 논의한다.

I. 서론

이 글은 한국 국제정치학이 안고 있는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론이다. 해방이후 약 60여 년 동안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양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대미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제정치 학자들 간에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관해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성립 가능성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우리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특수한 경험을 토대로 한 순수한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수립을 요구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¹⁾

주지하듯, 국제정치이론은 설명이론과 규범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설명이론은, 간단히 말해, 귀납 또는 연역에 의해 국제정치적 가설(들)을 발견 및 도출하고 이를 경험적 검증을 통해 일반화한 것을 가리킨다. 시공간을 초월해 부정되지 않는 이론이 발견될 수 있다면 국제정치는 실로 명확히 설명되고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규범이론은 국제정치와 관련한 윤리, 도덕, 당위, 규범, 가치를 다룬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어떠한 관계가 합리적(reasonable)이고 정당(fair)한가, 그러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국가 경계 밖에 존재하는 빈민들에 대한 의무를 부정하는 국가주의에 도전하는 존 롤스(John Rawls)적 세계주의(Cosmopolitanism), 또는 정의(justice)를 보편적 추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특정 국가나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마이클 월처(Michael Waltzer)식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등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 필자들은 이 글에서 규범이론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개발을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지배적 행위자도 규칙제정자도 아닌 한국으로서는 이들 간의 동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이론에 한국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치열했던 한국적 역사와 풍부한 지적·철학적·문화적 전통을 자산으로 삼아 국제정치의 규범이론을 선도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현실적이고 전략적이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상, 그리고 이미 시론적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²⁾ 이와 관련한 보다 진지한 논의는 후속연구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설명이론으로서 국제정치학의 한국적 현실 및 그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역설적이지만, 설명과 규범은 사실 구별할 수 없고, 또 구별해서는 안 된다. 이론은 이론가의 시대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는 하나이고, 이들을 별개로 보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이론은 이론을 범주화시키는 차원에서, 가치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규범이론과 구별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이론가들의 가치는 이론화작업 과정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모든 이론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어떠한 이론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그것이 가

1)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김용구(2003). 후자의 경우는 김영명(2006).

2) 전제성, 박건영(2004, pp. 602-609).

지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은 게임이론 또는 공식 모형(formal modeling)과 결합되어 대개 가치와는 무관한 숫자들로 표현되지만 그 결과가 실제 국제정치에 적용될 때는 국가를 합리적, 단일적 행위주체로 보고 생존과 확장, 번영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가치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필자들은 이 글에서 규범이론을 다루지는 않지만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며 가치를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관련해 필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유래한 보편적인 국제정치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중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기존 주류이론을 비판적, 주체적,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의 현주소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3장에서는 왜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이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4장에서는 왜 대미의존성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대미의존성의 지속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의존성 극복과 한국적 국제정치학 정체성 수립의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지향점 내지 대안적 접근에 대해 논의한다.

II.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의 현주소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정치학은 해방 이후 한국에 수입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지배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 국제정치학 연구는 연구자와 관련 학술지 및 단행본의 양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고 질적 측면에서도 일정 정도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국제정치학이 1950년대와 60년대 주로 미국의 국제정치학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번역하는 수준에 그친 ‘완제품 수입기’로부터 얼마만큼 ‘수입대체 산업’ 또는 ‘수출산업’ 단계로 이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⁴⁾ “한국 정치학회보’는 한국어로 된 미국정치학회 한국지회보를 넘지 못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한국 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을 고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⁵⁾ 특히 꾸준히 제기되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의존성의 지속과 한국적인 문제의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부재이다.

구체적으로, 현 단계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아마도 한국의 국제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큰 저항감 없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과 이론은 국가이익 개념과 세력균형 이론일 것이다. 사실, 국가이익이라는 현실주의적 개념은 카(E.

3) 전제성, 박건영 (2004, p. 597).

4) 한국국제정치학의 수입대체기 또는 수출산업으로의 부분적인 이행에 관한 논의는 하영선(1986, pp. 39-64); 함택영(2006, p. 18),

5) 김영명(2006, p. 14),

H. Carr) 등의 국제정치학을 미국적 사회과학으로 만든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정치적 현실주의의 핵심을 구성한다. 모겐소는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켜내고 제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정치학을 사회과학의 타학문과 차별화시키려 했던 모겐소의 고안물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지는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보듯,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은, 데이터의 분포에 관해 아무런 실질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평균이라는 개념과 같이, 이익 배분의 실재와 실체에 대해 실질적인 설명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물론 국가안보는 공공재로서 “가치가 추상적(nontangible)인 동시에 편익의 배분이 국내적으로 균등(symmetrical)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⁶⁾ 따라서, 안보에 관한 한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이 일정하게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로 상호의존성이 급격하게 증가된 현재의 세계정치를 안보와 비안보의 영역으로 구분짓기는 어렵게 되었다. 특히 안보 문제가 분단 등의 역사적 결과로 인해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이익의 개념이 남용 또는 오용될 가능성은 상존하며, 실제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나 군사전략가들은 집단이익을 관철하는데 이 개념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2003년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한국사회가 양분화 됐을 때 국가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로 17세기 명나라가 후금을 치는데 조선이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21세기 한미관계에 투영시키려는 지도자들도 있었다. 어쨌든, ‘한미동맹=국가안보=국가이익’이라는 기계적 등식이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다. 이러한 등식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이익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추구되는 것으로서, 이 논리를 연장하면 미국이 주도한 전쟁은 그 성격이 어떻든 한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경제적·문화적·철학적·평판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인데, 과연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포괄할 수 있는가?

다른 한편, 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에 실체가 있다 해도, 과연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위의 등식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냉전 동안, 권위주의 정권 기에 형성된 미국 맹신주의에 기반을 둔 그러한 등식은 점점 더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내키지 않지만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는 입장은 한국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따른 것일 뿐 그 근거도 빈약하며 실질적인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의 북미관계 전문가 대부분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을 전환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중간선거 패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한국

6) Zimmerman(1973, p. 1207). 그러나 정확히 표현한다면 편익의 배분이 국내적으로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비안보적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지만, 안보와 시민적 자유, 복지, 교육 등 사이에는 경합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 경향이 있다. 분단국인 한국과 같은 경우 안보와 통일이라는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짐머만의 주장은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는 맥락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발생한 일들이다.

대미의존의 다른 예로서, 세력균형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를 살펴보자. 주지하듯, 월츠의 세력균형 이론 또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철저하게 강대국 중심의 이론이다. 국제체제의 극성(polarity)은 강대국의 수로 계산되며, 국제체제의 안정성(stability)은 강대국 간에 대규모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⁷⁾ 안정성에 관한 월츠의 정의에 따르면 주변부에서 대리전 또는 약소국 간 지역분쟁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강대국간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제체제는 안정적인 것이다. 월츠의 체제이론에 내재된 강대국 중심의 논리를 무비관적으로 수용할 경우 한국의 당면한 현실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인가?

먼저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을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강대국에게 안정과 평화인 것을 우리의 평화와 안정인 것으로 인식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냉전동안 강대국들 간의 장기평화(long peace)는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간 일촉즉발의 전쟁발발 위협과 장기간의 긴장을 의미하였다. 냉전당시 미국과 소련의 입장에서는 양국간에 대규모 전쟁을 피하는 것이 바로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상유지국가들이었다. 이와는 달리 민족분단과 전쟁위험에 직면하고 있던 한민족 입장에서 본다면 냉전은 안정적이지도 평화롭지도 않은 시기이자 변경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즉 냉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남과 북은 현상변경국가라고 볼 수 있다.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냉전기장이 장기평화의 시기이며 안정적인 시기였다고 설명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을 많은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둘째로, 월츠의 이론 체계는 강대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관심을 끄는 중진국 또는 약소국에 관한 설명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략되고 있다. 국제체제의 구조는 중진국과 약소국의 행동에 어떠한 제약을 가져오는가? 상대적 힘의 분포 차원에서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진국 또는 약소국의 행동은 강대국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월츠의 이론을 충실히 소개해온 노력만큼이나 월츠의 이론적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주제 - 예를 들면 월츠의 국제체제에서 중진국 또는 약소국의 역할 - 에 어떠한 이론화를 시도했는지에 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른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은 그것을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한국과 한반도 주민의 사활적 이익에 반하는 상황을 야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하는 이론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핵심 개념인 민주주의와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고 조작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민주주의국가들 간에 전쟁에 발생하지 않는 경험적 현상은 흥미로운 퍼즐임에는 틀림없고,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인간적인 삶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의 논리를 무분별하게 연장하고 함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화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 이론을 정책구상의 영역으로 처음 편입시킨 클린턴 정부와

7) Waltz(1979).

는 달리, 민주평화론을 민주주의 확산, 미국의 안전, 세계평화를 위해 “도전받지 않는 미국의 힘”을 기꺼이 사용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제로 삼고,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다시 말해, 민주평화론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비민주주의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으로서 사용되었다는 말이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의 경험은 그러한 무모하고 정략적인 이론의 사용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 주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07년 11월 21일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영장 없는 도청, 물고문,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다른 형태의 논란들은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켰으며, 이는 반민주주의자들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민주평화론의 잠재적 파괴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⁸⁾

민주평화론을 한국과 한반도의 상황에 정책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떤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까? 북한은 인권탄압과 반민주적 정치체제로 세계적으로 이름나있다. 따라서, 한국이 민주평화론의 함의를 정책화하여 대북한 붕괴전략이나 군사공격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려 한다면 기대되는 평화보다는 기대하지 않은 파괴와 인간성 말살이 초래될 개연성이 크다. 물론 민주평화론이 이러한 우려까지 경고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권위주의 군사문화, 미국중심의 세계관,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배양해놓은 한국적 정치 상황 하에서 이 이론이 가질 수 있는 파괴성과 “자기부인(自己否認)”의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Ⅲ. 왜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이 문제되는가?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성 극복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한국에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비판보다는 외래이론의 적용이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극복을 위한 더 바람직한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 국제정치학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고, 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싱어(J. David Singer)는 체제수준이 아닌 국가단위 수준의 미국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가진 자민족중심주의와 편협성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싱어에 따르면 1945년 이후 미국에서 출판된 미국 국제정치학 교과서들이 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소련에 편중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국제정치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외교정책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⁹⁾ 1950년대와 60년대에 개발된 억지이론과 핵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소련과의 핵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8) Grieb(2007).

9) Singer(1969, p. 24).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각광을 받아온 민주평화론도 클린턴 행정부의 탈냉전기 세계전략인 관여와 확장(engagement and enlargement)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산 전략과 공생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국제정치학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 권력을 행사하는가? 인간은 지각능력의 한계로 인해 인간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념, 가설, 이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고도근시자가 세상을 보기 위해 렌즈나 안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순화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론은 역사적 산물로서 이론가의 사회적 존재와 주관적 가치 및 의도를 반영하며, 그것들은 시대적 사건들이나 관념들,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나 그 자신의 이해관계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론의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사를 포함한 모든 판단에 있어 이론가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고, 이런 의미에서 이론가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과 관련 “선택의 왜곡(selection bias)”과 “타당성 결여(irrelevance)”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¹⁰⁾ 예를 들어, 국제관계이론이 “주류의 관심”인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심층적으로 다루면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중국 및 한국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선택의 왜곡”의 또 하나의 명징한 예로 제시될 수 있다. “타당성 결여”의 예는 자유주의에 관한 국제 규범과 중국적 규범 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자 간의 차이는 자유주의가 중국문화와 유럽문화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 데서 기인한다. 유럽에서는 16-7세기 종교개혁기의 교회 권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기독교 국가의 법,” “유럽의 공법,”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문명 국가의 법”의 형성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청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중화체계의 위계적 세계질서에 대한 유럽국제체계의 침투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입되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즉 자유주의의 전달자가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적 담론의 주제는 인간의 성격(nature)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서 중국이 행사하는 자유의 정도였다.¹¹⁾ 오늘날 국제관계이론의 자유주의가 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보다 두 배가 더 많은 중국인의 문화와 규범을 이방인의 영역에 놓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이론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이론의 권력행사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 미국적 문제의식이 마치 자신의 문제의식인 것처럼 은연중에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문제의식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기부인”이나 “자발적 피착취”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부인,” “자발적 피착취”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은 국제정치학과 국제정치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변혁을 위한 실천적 잠재력과 관련이 있다. 현실주의자인 카(E. H. Carr)로부터 비판이론가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탈실증주의자들이 이론적 분석과 사실 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처럼 사실과 분석이 엄격히

10) 아래의 예들은 박건영(2004, p. 70)에서 전용.

11) Hughes(1995, pp. 428-29)

분리될 수 없다. 암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의학자의 암에 대한 연구는 암의 발병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사실과 이론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한 사회과학자의 이론적 분석은 그 자체로 사실의 일부가 되며 기존의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이 사회주의의 등장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가져왔듯이, 사실과 엄격하게 격리된 객관적 분석이라는 구분은 사회과학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¹²⁾

국제정치이론도 국제정치적 현상의 일부이며 국제정치적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현실주의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한다면 세계는 더 현실주의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상관없거나 또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이론들을 무비관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변혁시켜야 할 국제정치적 현상을 우리 스스로가 고착시켜버리고 재생산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IV.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의존성 지속의 메커니즘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미국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패권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성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존성은 불가피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국내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대미의존성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국제정치학이 지속적으로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이론적 정향과 구체적 연구주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야 현실적인 대안의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제외시킬 경우 미국 국제정치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성급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의존성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은 다양하다. 첫째, 지식사회학적 입장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 국제정치학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패권적인 지위를 통해 미국 국제정치학이 확산되며 대미의존성이 재생산된다는 것이다.¹³⁾ 물론, 이러한 지적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한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제정치학자가 그의 학문에서 더 한국적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반드시 미국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더 미국적 개념과 이론에 알게 모르게 젖어있고, 그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강의와 저작활동을 통해 “미국식” 국제정치학을 전파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교과서는 정상과학(normal science)의 영속화를 위한 교육적 장치이고, 그러한 교육적 형태(pedagogic form 교과서)는 과학의 본질, 그리고 발견 및 발명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제시한 바

12) Carr(1946, pp. 4-5),

13) 김영명(2006); 김웅진(2005); 홍성민(2006).

와 같이, 미국 교수에게 미국 교과서를 통해 배운 바는 "권위(authority)"로서 당연히 수용되고,¹⁴⁾ 이는 한국 내에서 강의되며 같은 맥락에서 수강생들에게 계속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러한 "미국화" 경향을 더 심화하는 요인은 한국의 학술제도가 미국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미국 저널에 실린 논문을 우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 여부가 국내 대학 강단에 서는데 결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영어강의 능력과 영어권 저널에 게재된 논문 업적이 임용과 승진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감에 따라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보상구조 하에서는 유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른 국가보다는 미국을 유학지로 더 선호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새롭게 미국에 유학을 떠난 예비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의 최신 국제정치학을 습득하고 국내에 들어와 더 유리한 임용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강단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들에 의해 미국 국제정치학에 대한 의존성이 다시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이 유지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미국식 국제정치학이 지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국제정치학자의 문제의식 결여와 미국식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찾아진다.

셋째, 한국 국제정치학의 미성숙(immaturity)은 상대적으로 엄밀한 이론체계와 방법론으로 무장된 미국식 이론이 한국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는 이유가 된다. 일례로, 한국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외교정책을 다룬 글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를 포함한 기초연구가 결합된 학문적 분위기에서 나온 정책연구나 지역연구는 시사해설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¹⁵⁾ 설령 이론을 적용하는 논문이 있더라도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된 이론들을 단순히 소개하고 피상적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에 그치거나 한국에 주는 함의만을 형식적으로 다룰 뿐 엄격한 연구 설계와 이론적 가설의 검증,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분석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6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의 국제정치학을 수입해 오기만 했을 뿐 우리의 힘으로 축적한 이론적 연구결과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연구 성과가 축적적인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우수한 이론적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¹⁶⁾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의 연구만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대미의존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넷째, 미국중심적인 국제정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거나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진지하게 꿈꾸기 어렵게 만드는 국내 국제정치학계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서구, 특히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에게는 전문성보다는 다방면의 분야를 연구하게끔 만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오랜 연구 끝에 완성된 전문성이 높은 단행본 연구보다는 단기에 끝낼 수 있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논문들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학문적 성취도 이외의 다른 현실적 보상들을 고려할 때 더 합리적인 행동인 것이다. 또한 학계의 전문성 기대수준이 높지 않고 타 연구 분야로의 진입장벽도 높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위한 업적 점수나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연구자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과 상관없이

14) Kuhn(1996, p. 81).

15) 김용구(2003), p. 301.

16) 민병원(2006)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 때문에 단순히 서양의 국제정치학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적실성 여부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수준의 국제정치학 연구들이 양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또 다른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심리적인 제약이 지적될 수 있다. 약소국 또는 피보호국 신드롬이라 칭해도 좋을 것이다. 과거 냉전기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광범위하게 배양된 이 신드롬은 한마디로 한국의 독자적 외교 또는 자주적 관념은 불필요하거나 위협하기도 하다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세계는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선의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게다가 미국은 최대강국으로서 선택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같이 움직이면 된다는 의식이다. 한국이 독자적 외교를 추구한다면 이는 선의 세계에서의 퇴출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버림받은 꼴이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이익은 한국의 이익인 것이다.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미국에 의해 외적으로 부여되던(external validation)¹⁷⁾ 시기에 광범위했던 이러한 신드롬은 한국이 국제정치나 외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 싱크탱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이유와 맞닿아 있다. 물론 한국이 다양한 부문에서 성장하고 개방되고 민주화되어 그 존재감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신드롬이 상당부분 관성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V. 한국적 대안의 방향

위에서는 한국 국제정치학이 미국 국제정치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미의존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국제정치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 모순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각, 그리고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디자인하는 일일 것이다. 필자들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단·중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목표는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담지한 국제정치이론과 국제정치학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실천의 길잡이가 만들어짐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적 현실에 기반하여 본 세계의 모습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세계가 받아들여지게 됨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바람직하지만, 아마도 장기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필자들의 한사람은 1970년대 우연히 일본 TV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뉴스 말미에 세계의 날씨를 보여주는데, 당시 한국인으로서의 생경하고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동구 공산국인 불가리아의 날씨를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북극성(the lodestar)’은 미국이었고, 한국의 모든 외교는 그로부터 시작하고 그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반일교육 덕분에 한국과 수준이 비슷하리라 생각

17) Mastanduno, Lake, and Ikenberry(1989, p. 464).

했던 일본이 불가리아라는 나라의 날씨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은 젊은 지식인에게 충격이었다. 당시 일본은 불가리아의 날씨도 알려줘야 할 만큼 이해관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의 이해관계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영국학파가 있지만 일본학파가 없는 현실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사회와 시민이 함께 가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할 이 프로젝트는 국제정치학자가 시작하고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의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한국의 역량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미국 등 강대국들의 그것과 상이한 현 단계에서 한국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만을 조명하고 한국의 이익만 주장하는 국수주의가 부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에서 강대국 논리는 엄연한 현실이다. 현존하는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이론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더 가깝다. 현재 강대국이 아닌 한국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간파하고 해결하려면 강대국과 현실의 논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급선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이론이나 해석은 기존의 주류이론과 마찬가지로 자민족중심적이거나 보편성이 떨어지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거나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단·중기적 목표는 국제정치의 주류이론이 한국의 현실과 이익을 잘 조명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면서, 이러한 이론과 한국의 현실 간의 부합도(fit)를 높이기 위해 발상과 해석상의 조절기제를 비판적 안목에서 개발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한국의 외교사를 한국적 국제정치학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하는 질문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역사에서 나타난, 현재에 적용가능한 바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역사는 상당부분 동북아 국제관계사의 일부분이었고, 때로는 국내사 역시 국제정치적으로 규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삼국시대의 통일, 고려의 성립, 송·원과의 관계, 조선의 성립, 임진왜란, 병자호란, 개항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는 국제정치의 과란만장한 변화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외교정책결정자 혹은 당시의 국제관계이론가들의 전략과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교훈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조선 중기 광해군의 대금 기미책, 소현세자의 대청 화해정책, 효종의 북벌정책은 새로 등장한 중국의 패권에 대한 제각기 다른 정책과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한반도의 소극적 생존전략과 적극적 동북아 전략을 읽을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들의 내외적 제약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17세기 조선의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그 당시의 제상황이 현재 한국에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있고, 또한 전략적 사상적 교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외교사를 한국적 국제정치학에 흡수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분별력, 그리고 진지한 학제간 협력을 필수적으로 한다.

미국 역사에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정치적 개념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열렬한 민주당원이자 미국민주주의보(United States Magazine and Democratic Review)의 창설자이자 편집인이었던 존 오설리번(John O’Sullivan)이 1845년 이 잡지의 사설을 통해 만들어

넨 이 개념은 1840년대 서부 병합을 촉진하려는 잭슨주의 민주당원들이 주로 사용하였고, 1980년대는 태평양 넘어로의 팽창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공화당원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요점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는 미국인들은 이러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회와 다른 국가에 마땅히 보급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는 것이다. 콜럼비아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 앤더스 스테판슨(Anders Stephanson)은 “명백한 운명”, 특히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신념은 미국 정치이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드로 윌슨이나 로널드 레이건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⁸⁾ 물론 조지 W. 부시도 이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지향하는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VI. 결 론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갖고 있는 대미의존성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이유를 규명하며, 단계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유래한 보편적인 국제정치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중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기존 주류이론을 비판적, 주체적,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 필자들의 주장이다.

한국의 한 국제정치학자는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안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이른바 ‘유길준 모형’과 ‘신채호 모형’ 간의 구분으로 표현한 바 있다.¹⁹⁾ 유길준 모형은 ‘개념적 보편주의’에 입각해 외래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초기 계몽적 지식인의 입장인데 반해, 신채호는 ‘체험적 특수주의’에 입각하여 주체적 입장에서 외래이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아래의 신채호 사설문의 인용은 국제정치학의 한국적 정체성 수립과 관해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 함으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를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나?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통곡하려 한다.²⁰⁾

한국은 “유길준”의 단계에서 “한국학과”로 바로 갈 수는 없다. “신채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18) Anders Stephanson, *Manifest Destiny: American Expansion and the Empire of Right* (Hill and Wang, 1996).

19) 노재봉(1988, pp. 35-40).

20) 단재 신채호, “낭객의 신년만필,” 『동아일보』 1925년 1월 2일

http://www.danjae.or.kr/sub.php?doc=/sub/speech_act_5_1.html. [2007, September 10]

참 고 문 헌

- 김영명. 『우리 정치학 어떻게 하나?』. 서울 : 오름, 2006.
-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韓國政治學會 五十年史』. 서울 : 한국정치학회, 2003.
- 김용진, 『과학체계모니의 정치적 영상』 (서울 : 청목출판사, 2005)
- 노재봉. “한국국제정치학의 지성사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28집 1호, 1988.
- 민병원. “국제정치학 : 한국적 이론을 위한 성찰, 재성찰, 실천, 그리고 제안.”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년 12월 12일, 외교안보연구원.
-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역사와 계보,” 우철구 · 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 사회평론, 2004.
- 박상섭. “한국국제정치학과 외래이론수용의 문제점.”
- 신채호. “낭객의 신년만필” [Online] Available : http://www.danjae.or.kr/sub.php?doc=/sub/speech_act_5_1.html. [2007, September 10]
- 전재성 ·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우철구 · 박건영 편 『현대 국제 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 사회평론, 2004.
- 하영선. “한국국제정치학의 새로운 방향모색,” 김경동 · 안정시 편, 『한국사회과학방법론의 탐구』.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6.
- 함택영.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반성 : 이론과 역사의 만남.”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4호 2006년 겨울, 55호.
- 홍성민. “논평 : 미국유학과 학문의 정치사회적 효과,” 『교수신문』, 2006년 4월 12일.
-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46).
- Grier, Peter. "Global spread of democracy stalled : Putin and Chávez are using oil money to create other models, while others just step back."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November 21, 2007).
- Hoffmann, Stanley. "An American Soci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in Stanley Hoffmann, *Janus and Minerva : Essay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Politics*. Boulder : Westview Press, 1987.
- Hughes, Christopher. "China and Liberalism Globalized," *Millennium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No. 3 (Winter 1995).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Mastanduno, Michael, David A. Lake, and G. John Ikenberry, "Toward a Realist Theory of State Ac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3, 1989.
- Singer, J. David. "The Level of 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 A Reader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 The Free Press.

Stephanson, Anders. *Manifest Destiny : American Expansion and the Empire of Right*
(Hill and Wang, 1996).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 Addison-Wesley,
1979.

Zimmerman, William. "Issue Area and Foreign Policy Process : A Research Note
in Search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VII, No. 4 (December, 1973).

Abstract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Korea : Reality and Search for an Alternative

Jinseog Yu* · Kun Young Park*²¹⁾

This study aims to explore correctives to overcome the heavy dependence of the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hereafter IR) scholarship on American IR scholarship.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although it is desirabl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develop universally valid IR theories "made in Korea," from a short to midium term perspective it is more realistic to make good use of the American mainstream scholarship in a critical, self-conscious, and strategical manner.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 In chapter 2 we discuss the on-going debate among Korean IR scholars on the issue of Korean academia's heavy dependence on American IR theories. Chapter 3 discusses why the question of academic dependence matters. In chapter 4, we examine the cause of the persistence of the Korean scholarship's heavy dependence on American scholarship. Overcoming dependence and searching for "Korean-style" IR scholarship would be possible only if we closely examine the cause of the dependence. In chapter 5 we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style" IR studies.

■ 논문접수일 : 2008년 4월 7일, 논문심사일 : 2008년 5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5월 13일

21) Assistant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